

CEO 동정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민원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일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증축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지역 언론인들과 면담을 갖고, "수송수요 및 운영 효율성을 반영하여 과잉투자, 국가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KR열린마당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일 열린 '2월 KR열린마당'에서 우수직원에 대한 상상을 갖고,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기업, 자랑스러운 공기업이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철도건설 안전사고 전년 대비 43% 대폭 감소

- 공단과 시공·감리사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 결실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11년도에 철도건설현장에서 2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전년도의 35건보다 43%가 감소하였으며, 매년 건설사업량이 지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철도공단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영지원안전실은 지난해 김광재 이사장 취임('11.8.23) 이후 "무재해 안전시공"을 6대 경영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철도건설현장의 취약개소를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시공·안전관리를 현장 공사관리관이 전담토록 하고, 점검주기를 설정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시 PM·건설처장이 단계적으로 직접 확인토록 체계화하였으며, 터널 굴착시 계측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계측 수치도 집중 점검토록 하였다.

<경영지원안전실 박동희 기자>

(단위 : 건,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사고건수	32	37	34	24	34	28	35	20
건설사업비	25,842	32,055	35,113	38,772	45,523	61,008	55,732	56,677

■ 사고예방 점검 활동 추진실적

- 316개 건설현장 중 취약개소, 저가현장, 워크아웃 등 사고위험이 높은 173개 현장을 집중점검 활동 전개
- 사고유발 위험요인 6,461건 사전제거 및 개선

점검기간	점검현장	점검횟수	참여인력	지적 및 개선사항
'11. 1 ~ 12월	1,099개현장	45 회	1,870명	6,461건

철도설계기준 선진화로 건설비 20% 절감

- 공단, 설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공단은 ▲교량설계에 적용하는 열차하중을 실제 하중과 유사하게 표준화하여 규모 축소 ▲열차 풍압 등을 고려하여 복선철도 선로간격 축소 ▲터널의 공기압, 열차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면 축소 ▲터널 방재설비 별 위험도 저감효과 정량화로 적정규모의 방재시설 설치 ▲신호안전설비 설치기준을 열차속도별로 세분화하는 등 철도설계기준을 선진화한다.

공단은 그동안 철도 설계·시공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등 국내 우수기관과 합동으로 '철도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기획에서 국토해양부, 학계, 연구기관, 시공 및 설계업체 등의 철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설계기준 개정(안)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단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상반기 중 설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터널단면 등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철도건설사업에 반영하여 이미 약 2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철도건설로 시설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건설비도 최대 20% 절감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관리 성과목표관리제 도입·시행

- 업무성과평가,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발굴·공유 -

공단은 5개 지역본부의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2011년도 성과목표관리제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소속을 선정하고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경영목표 달성 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관리분야의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10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임시선로 궤도자재 재활용 등 11건'의 혁신활동을 통해 7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법정관리중인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17개 업체)과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공단-엔티에스이앤씨)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으며, 금경사지 점검을 6월에 조기 시행하여 위기대비 등 재해예방 효과를 높여 철도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수도권본부에서는 민원업무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처리를 법정기한 30일에서 7.4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고객 불만족 신고가 '11년 상반기 16건에서 하반기 9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실현하였다.

공단은 지역본부의 성과목표관리제 시행이 경영성과 창출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 신설 등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사업비 증가 제동

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 개정으로 사전 내부심사 도입

공단은 최근 13년간의 총사업비 변경 원인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현업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최소화, 관련기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과의 협의기간 단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 총 41개(일반철도 32개,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6개)

이에 따라 역 신설 등 다양한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지역 민원, 무분별한 구조물 형식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지역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방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총사업비 관리 체계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으로 현장 설계변경 최소화 및 사업관리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개정에는 ▲지자체 요구사항, 역 신설 및 토공구간 교량화 등 중요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내부 심사제도 도입 ▲총사업비 집행과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익년 개통사업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점검시행 ▲발주 및 설계변경 전 시행하는 총사업비 조정확인 절차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본부, 여수시와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 및 관리협약 체결

- '철도폐선 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과 공공복리 증진 -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여수시 관내 전라선 철도폐선부지(약25.7km, 여수역~(구)울촌역)를 개발하기 위해 이 협약을 계기로 방치될 경우 무단점유·폐기물 투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었던 철도 폐선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임영록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4월까지 용산~여수간 운행시간을 2시간 57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이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온 폐 철길을 다시금 주민의 복지와 여가를 위한 친근한 벗으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되고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지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이에 부응하여 "향후 약10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선부지를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청인 공단과 계획 입

안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방치될 경우 무단점유·폐기물 투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었던 철도 폐선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본부는 자체사업으로 오림터널~마래터널 약4Km 구간에는 사륜(ATV)오토바이사업, 미평역~오림터널 약 2.2Km구간은 승마트레킹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수시와의 공동협약을 통해 그동안 폐선부지 개발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인허가 등에 여수시의 협조는 물론 지역개발과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사업추진으로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등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본부 김규곤 기자>

